

中企부터 자금회수 하나

광주·전남 내년 中企 정책자금 1,533억 '반토막'

대출 만기 연장·보증 한도 원대복귀 ... 자금난 심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돈줄 쇄기 가 시작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돈 가뭄 사태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내년부터 대폭 축소될 것이 확실시되는데, 대출 만기 연장과 보증비를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조치도 단계적인 축소가 예상되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풀린 돈을 회수하는 정부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중소기업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예산안 중 정책자금 규모는 3조1천 355억원으로, 올해 5조8천555억원보

다 46.5%(2조7천200억)나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천297억6천만 원이던 광주·전남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감소폭을 고려하면 광주·전남 정책자금은 올해 절반 수준인 1천533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지방 중소기업에 배정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자금'과 '기술사업화 사업자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항목에서 빠져 올해 각각 532억원과 113억원씩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배정됐던 예산이 내년에는 아예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던 중소기업 지원 비상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한 것도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대출 만기연장, 보증비를 확대, 패스트 트랙(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 비상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만기 돌아오는 신보·기보 보증분, 일부 중기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전액 만기 연장했던 방침을 내년부터는 정상화해 금융권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만기 연장 여부를 금융권에 말길 경우 신용 리스크를 줄이기 위

한 대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했던 조치도 원래대로 강화하고 신규 발급하는 보증서 보증비율도 금융위기 이전(95%~85%)으로 회원시킨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별한 중기 대출을 억제 한다지만 보증한도 축소와 대출 만기연장이 되는 상황에서 정책자금까지 줄어들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광산업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7)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돈이 풀렸다지만 지방에서는 구경도 못 한 업체들이 많다"며 "출구전략이 중소기업부터 시작되면 열악한 지방 업체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G20재무장관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끝난 회의에서 세계 경기 회복이 확 고해질 때까지 정책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의 국제적인 정책 대응 결과로 금융 및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책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높은 실업 등이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한 경제 상황을 평가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출구 전략으로 원칙으로는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및 공조 강화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 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상황 및 정책 간 상호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 등이 제시됐다. 연합뉴스

中企 인재 육성 맞춤 취업 교육

중기청 '특성화 전문계고 활성화' 유관기관 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9일 광주마드리자 광주호텔 4층에서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특성화 전문계고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약식을 한다.

협약 체결 기관은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청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한설비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지역

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정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청이 지정한 지역 내 '특성화 전문계고등학교'는 산업체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내 특성화 전문계고는 광주여상·전남여상·전남공업고·광주전자공고·순천공고·화순실고 등 6개로, 이를 학교 내 25개 학과 5천130여명이 이같은 교육을 받게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어보고 사세요

고아코리이는 8일 용산아이파크몰에서 F/W 풋웨어 신상품을 선보이는 소비자 체험 이벤트를 실시했다. 모델들이 자유의 여신상, 돌하루방, 스팽크스, 에펠탑 미니어처 앞에서 고어텍스 풋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이벤트는 28일까지 매주 주말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내년에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호남 국세 절반 여수서 걷힌다

8조2천306억 중 4조3천억 징수 ... 해남 136억 최하위

지난해 호남지역에서 낸 국세가 전국의 5.2%를 차지하는 가운데 호남에서 낸 국세의 절반이 이상이 여수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청 관할인 호남지역에서 낸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국세 수입은 4조2천306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 157조5천억원의 5.20%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청 산하인 14개 일선 세무서 가운데 여수시를 관할하는 여수세무서의 국세 수입은 4조3천820억원으로 광주청 전체 국세 수입의 53.24%를 기록했다.

이는 여수산단에 대거 몰려있는 대규모 석유화학업체로 인해 법인세와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수세무서는 세수 실적에서도 전국 107개 세무서중 서울 남대문세무서, 영등포세무서, 울산세무서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광주청 관할에서는 여수세무서에 이어 광주세무서(6천839억원), 서광주세무서(6천39억원), 북광주세무서(5천82억원) 등의 순으로 세수 실적이 많았다. 반면 해남·완도·진도·강진·장흥 등 군 지역만 관할하는

※2008년 기준, 전북은 제외

해남세무서는 지난해 136억원의 국세밖에 징수하지 못해 전국 최하위 수준인 106위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쳤고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3대 세목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8%였다"며 "대기업이 많은 여수에서 호남 국세의 절반 이상을 거둬들인다"고 설명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하이테크센터 준공

8,800명에 416억 달해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광주청 관할인 호남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천800명에 부과 세액은 416억원에 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41만2천500명에게 2조3천280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된 것에 비하면 대상자 수로는 2.13%, 부과 세액으로는 1.78%에 불과하다. 아파트 등 낮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호남지역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72만원으로 전국 평균(1천5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전남에서는 2천200명에 84억원이 부과됐다.

광주청 산하 세무서별로는 광주시 서구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가 대상자는 1천20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부과액은 42억원인데 반해, 동구와 남구를 관할하는 광주가 1천100명에 123억원으로 거액의 부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서울 강남·반포·서초 등 '벼를 세븐'에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49.6%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3천200명에 201억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6일 기준 지난달 30일과 비교

</div